

민주 도당위원장 선거 ‘계파 구도’ 변수 부상

윤준병 위원장 연임 도전 속 이성운·박희승 의원 등판
선거는 내달 15일, 중앙당 전당대회 일정과 맞물려 진행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전북 정치관계에서는 차기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선거 구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가 단순한 지역 당 운영 책임자 선출을 넘어 중앙당 대표 경선과 맞물린 계파 경쟁의 지역 대리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후보들의 행보와 당내 역학 관계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윤준병 현 전북도당위원장이 거론된다. 윤 위원장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 지사가 지난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도당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약 8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하며 6·3 지방선거를 지휘했다. 안정적인 당 운영과 지방선거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연임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윤 위원장은 도당 조직 안정과 중앙당과의 소통 지역 현안 대응 등을 강조하며 차기 도당 운영의 연속성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설 후보군으로는 전주를 지

역구의 이성운 국회의원과 남원·장수·순창·임실 지역구의 박희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인물은 이성운 의원이다.

이 의원은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당초 정 전 대표의 재도전에 맞춰 최고위원 선거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14일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면서 향후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전북도당위원장 선거 출마를 통해 지역 정치 기반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의원은 아직 공식적인 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박희승 의원 역시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박 의원은 지역 기반과 초선 의원으로서의 정치적 입지를 바탕으로 도당 위원장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로서는 윤준병 위원장의 단독 출마 가능성과 함께 이성운·박희승 의원 등이 참여하는 다자 구도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최종 경쟁 구도는 후보들의 결심과 당내 조율 과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준병 위원장



이성운 의원



박희승 의원

다. 관건은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가열되고 있는 당 대표 경선 구도가 전북 도당위원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현재 민주당 대표 경선은 송영길·김민석·정청래 후보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당내 세력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당위원장 선거 역시 중앙당 권력 구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성운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해 온 인사로 분류되고 있으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민석 전 국무총리 등을 비판하는 등 당내 강경 개혁 성향을 보여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윤준병 위원장과 박희승 의원은 상대적으로 김민석 전 총리 측과 가까운 흐름으로 분류되고 있어 당내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색깔을 가진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북도당위원장 선거가 정책과 지역 발전 비전 경쟁보다 중앙당 계파 경쟁의 연장선으로 비쳐질 경우 지역 정치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전북은 국회의원이 10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 내부 갈등이 부각될 경우 중앙정부와의 협력, 주요 현안 해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은 지난 유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 출범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새롭게 출범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정과 함께 전북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새민군 개발, 국가 예산 확보, 인공 지능(AI)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을 연결하는 정치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도민들은 차기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게 특정 계파의 대표자가 아닌 전북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의 특별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도당위원장 선거가 당 대표 선거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결국 중요한 기준은 누가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돼야 한다”며 “당 대표 선출에 휩쓸리는 계파 간 경쟁으로 비쳐질 경우 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차 정기 전국당원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일정을 공고했다.

예비경선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5일 낮 12시부터 7월 16일 낮 12시 까지이다. 대상은 당규에 따른 예비경선 선거인단이다.

열람은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후 가능하며, 개명이나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 정정 사항이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오는 8월 15일 치러지는 전북도당위원장 선거는 중앙당 전당대회 일정과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도당 위원장 후보들의 출마 선언과 당내 조율 과정이 전북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완주, 민선9기 첫 투자유치 포문

한솔케미칼, 일반산단 내 첨단 연구시설 등 확충

완주군이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1,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며 첨단산업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14일 완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도 (주)한솔케미칼과 함께 반도체용 핵심소재 제조시설 및 첨단 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한장안 (주)한솔케미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완주산단의 대표 기업인 (주)한솔케미칼은 기존 사업장(5만 7,813평) 부지에 오는 2029년까지 1,000억원을 대대적으

로 투입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부터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차세대 첨단 소재 거점’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20명의 신규 직접고용이 창출되며, 완주군이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핵심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에 기반을 두고 기술혁신을 거듭해 온 (주)한솔케미칼이 과감한 증설 투자를 결정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채용의 확실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인허가 등 맞춤형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정부, 부동산정책 국민 의견 듣는다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토론회

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 마련을 위해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정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3개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의견 수렴은 최근 주택시장 변화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금융 지원, 세 부담 조정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분야별 토론회는 14일 국토교통부 주관의 주택공급(규제) 분야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 주관 주택금융 분야, 16일 재정경제부 주관 부동산세제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각 토론회에는 해당 부처 장관이 참석하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 과정은 전 국민에게 생

중계될 예정이다.

논의 대상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여부부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 도심 유휴부지 활용,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공급 비중 등 폭넓은 내용을 포함한다.

또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청년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조정, 정책대출 확대 여부, 전세대출 압도세율 조정, 재건축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 지역별 세 부담 차등 여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취득세 조정, 고령자·장기 거주자 세제 혜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국민을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인 ‘부동산토론회.kr’도 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주택공급, 금융, 세제 등 관심 분야를 선택해 정책 개선 의견과 제안, 찬반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분야별 토론회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종합해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제9회 지선 선거비용 250억 지출 내역 공개

전북선관위, 내년 1월 11일까지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와 선거비용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수입·지출내역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은 2027년 1월 11일까지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infonac.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25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도지사선거 후보자 5명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총 30여억원이며, 후보자 1인당 평균 6억900여만원을 지출했다. 도교육감선거 후보자 2명의 경우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28억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4억4,000여만 원이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4명의 후보자가 총 8억8,0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으며,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억2,000여만원이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 분석을 통해 선거비용·정치자금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허위 보고 및 불법지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하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의회-건보공단

시민 건강증진 협력

전주시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남부지사와 함께 지역 내 노인 복지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주시의회 최후만 의장과 김정명 복지환경위원장은 14일 의정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상용 북부지사장과 류성숙 남부지사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 복지 수요 적절성 대응 방안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 방지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견이 교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은 “전주시의회의와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튼튼한 건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명 위원장은 “금증하는 노인인구에 맞춰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조례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후만 의장은 “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해서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촘촘히 보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며 “앞으로 공단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현장 밀착형 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조례 제정 등 의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신규 성장사다리기업 지정 수여’

14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열린 2026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리더스 혁신포럼에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신규 성장사다리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닫힌 문, 제가 열겠다”

송영길 민주 당대표 후보 “당대표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2석 모두 청년에게”

오는 8.17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국회의원이 청년 최고위원제 무산과 관련해 “청년에게 닫힌 문을 제가 열겠다”며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송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제가 무산됐다”며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의결한 제도를 일부의 정략적 판단으로 없애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최고위원들의 자기 정치가 전당대회를 어지럽히더니 끝내 청년의 지리까지 집어삼켰다”며 “말로로는 청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행동은 반대로 가는 정치가 됐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특히 “당대표가 지명하면 된다”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영길

그는 “청년의 대표성을 당대표의 선의에 맡기는 것인가”라며 “청년의 대표성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고, 호의가 아니라 제도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선출 이후 구체적인 청년 정치 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이미 약속드린 대로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를 모두 청년에게 드리겠다”며 “취임 즉시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만 아는 청년이 아니라 일하고, 집을 구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보통 청년의 목소리를 지도부 테이블

에 얹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명에서 멈추지 않고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를 당헌·당규에 명문화하겠다”며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청년의 권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송 의원은 자신의 정치 입문 과정도 언급하며 청년 인재 발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젊은 피 수혈’ 1호로 서문임균의 저 송영길을 공천해 국회로 보냈다”며 “청년에게 과감히 문을 여는 것이 김대중 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2의 젊은 피 수혈에 제가 앞장서겠다”며 “2030 없이는 민주당의 미래도 없다. 청년과 함께,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민주, 당대표 선호투표제 실시 위한 당규개정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선호투표제 실시를 위한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기상 민주당 전준위 총괄본부장은 14일 당규 개정을 위한 당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실시의 방법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를 명확히 했다”며 당규 개정안 의결을 발표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를 순차 기명한 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떨어뜨리고, 해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차순위 후보에게 표를 재배분한다.

민주당에서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호투표제를 통한 당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일었다. 사실상 일 대 다 구도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 측이 반발해 왔다. 당무회는 이날 기존 당규상 선호투표 조항에 포함된 ‘중간 개표 결과 비공개 원칙을 ‘중간 계산 과정 비공개’ 원칙으로 바꾸는 세부인도 의결했다.

한편 당 최고위원인 이성운 의원은 ‘선호투표제’ 반대를 이유로 “더 이상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뉴시스